일반논문

김대중의 경제사상에 관한 검토
—경제적 민주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류동민**

불평등한 민주주의와 평등한 민주주의 **강명세**

과거사 피해보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광주민중항쟁 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피해보상과 국가배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영재**

죽은 자의 몸과 근대성
—한국의 전사자 ·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 연구 **노용석**

김대중의 경제사상에 관한 검토

경제적 민주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류동민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논문요약〉

이 글에서는 '대중경제론', '대중참여경제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의 세 단계에 걸쳐 김대중의 '경제적 민주주의' 개념의 구조에 관해 살펴본다. 각각의 단계에서 지향하는 당위적 개념들은 대중경제, 대중참여경제 그리고 민주적 시장경제로 변화하여 갔다. 그러나 각 단계들에서 당위적 목표의 밑바탕을 이루는 개념으로는 계급 · 계층 간의 세력균형과 각 주체들의 정치 · 사회 · 경제적 의사 결정에의 참여라는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놓여 있었다. 즉, 전체적으로 '세력균형'과 '참여'를 두 가지 축으로 삼는 경제적 민주주의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김대중 경제사상의 내적 논리와 그 한계를 이해하는 지침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 김대중, 대중경제론, 경제적 민주주의

*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과 김태동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물론 남아 있을 모든 오류는 필자의 책임이다.

1. 서론

김대중(金大中, 1924~2009)은 야당 정치인으로부터 출발하여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사십여 년 이상 한국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특히 그는 젊은 시절부터 동시대의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경제 문제에 관해 뚜렷한 철학을 갖고 있었고, IMF 위기의 시작과 더불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대중경제론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재야 경제학자 박현채(朴玄埰, 1934~1995)에 의해 주장된 민족경제론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김일영 2006; 류동민 2007; 이병천 2007). 즉, 대중경제론의 초기 단계인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박현채의 경제이론이 정치인 김대중의 경제정책관련 공약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대중경제론 그 자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미 출간 상태이지만—필자도 참가한 바 있는 김대중도서관 연구프로젝트인『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을 통해 이루어진 바 있다(Rieu 출간 예정).

한편 대중경제론 그 자체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1970년대 재야세력의 경제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들이 갖는 일반적 특징 및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들은 있다. 대표적으로 김보현은 민족경제론이나 대중경제론이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론과 마찬가지로 생산력 지상주의라는 인식틀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김보현 2006). 이와 같은 지적은 민족주의 일반에 대한 비판이라는 맥락에서 이른바 뉴라이트의 보수적 해석(이영훈 외 2006)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적 역사해석(임지현 1999)과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대중경제론은 양쪽에서 협공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즉, 한편에서는 박현채-마오쩌둥(毛澤東)류의 신민주주의론이 포퓰리즘과 결합된 버전에 지나지 않는 좌파이론이라는 비판(김일영 2006)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동원을

최우선시하는 인식틀을 갖는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개발독재론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비판(김보현 2006)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중경제론이라 불리는 김대중의 경제철학 및 정책프로그램은 그의 활동기간이 긴 만큼이나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평가된다. 즉, 대중경제론에는 1971년 대통령선거 당시 야당후보로서의 공약 성격을 갖는 '대중경제론'(대중경제연구소 1971), 1980년대 미국망명 당시에 작성되고 이후 개정 증보 발간된 '대중참여경제론'(김대중 1986[1997]), 그리고 1997년 대통령 당선 이후 제기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이른바 DJ노믹스) 등의 세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1)]

그런데 이들 각각에는 일정한 질적 차이가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그것은 현실의 변화에 따라 이론이 굴절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를테면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당초 비현실적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프로젝트가 점차 현실에 굴복해가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한다(김일영 2006). 반대로 진보적 입장에서도 IMF 위기 국면에서 당초 사상이 변질되면서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에 투항한 것으로 이해한다(이병천 2007). 특히 제1단계, 즉 1970년대 초반의 대중경제론이 마르크스 경제학자인 박현채의 책임하에 민족경제론적 요소를 강하게 띠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후의 제2단계(대중참여경제론) 및 제3단계(DJ노믹스)에서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은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평가를 염두에 두되, 다소 다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즉, 김대중의 경제사상이 두 번에 걸쳐 질적인 변화를 겪는 과정의 밑바탕에 놓인 경제적 민주주의 개념의 내용과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야당정치인으로서의 김대중이 군사정권에 일관되게 맞서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경제

1) 아래에서는 편의상 이들을 각각 대중경제론, 대중참여경제론, 병행발전론으로 명명하였다.

적 민주주의에 관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거의 한 세대에 걸친 여정 끝에 대통령이라는 국가 정책의 최고책임자가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또는 형성되어 갔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물론 김대중은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는 매우 현실적인 정치가였으므로 학자들과는 달리, 현실의 정치적 세력관계에 때로는 맞서고 때로는 순응하면서 생각을 변모시켜 갔을 것이다. 그러나 제1단계에서 제3단계에 이르는 대중경제론의 변화과정을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김대중(1969)이나 김대중(1970) 등에는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철학적 비판과 더불어 '행정부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자거나 '관영독점기업을 민영화하자'는 등의 주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단지 민족경제론의 현실 정치적 버전으로만 초기의 대중경제론을 이해하는 것이 잘못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김대중의 이름으로 발표된 기본 문헌들을 검토함으로써 경제적 민주주의에 관한 대중경제론의 이해방식이 어떻게 형성, 변화되어 갔는지를 분석한다. 이 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과연 김대중, 나아가 1970년대 재야 민주화운동 세력의 경제사상이 개발을 지향하는 동원체제라는 관점에서 박정희 정권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그저 "부정부패 없는" 효율적 동원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이해되었는지에 관해 검토하는 것이다. 이 경우 무엇보다도 먼저, 발전과 민족주의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은 추상적 이론 수준에서는 타당한 것일 수 있으나, 당대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론적 역사해석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론뿐만 아니라 당대의 저개발국 개발이론의 상당수는 이른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공통된 요소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즉, 과거의 텍스트 속에서 몇 가지 언술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통해 사후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민주화를 위한 당대의 치열한 대결과

급박한 투쟁 상황을 간과하거나 극단적으로는 희화화하는 보수적 해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이 글의 결론이 그 자체로 다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는 확정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진보적 입장에서 IMF 위기 이후 대중경제론의 "투항"으로 이해하는 DJ노믹스의 논리가 사실은 1970년대 초반 대중경제론 1단계에서부터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도 없다. 그 경우 대중경제론에 내포되어 있는 경제민주주의의 상(像)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라는 이 글의 내용이 전체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적 민주주의: 참여와 균형

최근 간행된 자서전에 따르면, 김대중은 1971년의 대통령 선거 과정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경제민주주의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대중 경제 노선은 경제 성장과 소득의 공정 분배, 그리고 물가 안정이라는 세 가지 과제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경제 민주화를 이루려는 구상이다.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만을 위한 독재 경제 정책은 결국 부작용이 누적되어 경제난국은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대중이 참여하여 상호배타적 세 가지 분야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대중이 참여하는 경제란 결국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함이다.(김대중 2010a, 222)

『김대중씨의 대중경제 100문 100답』(대중경제연구소 1971)의 검토를 통해(류동민 2007), 필자는 그것이 박현채의 영향하에서 작성된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참여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김대중의 경제민주주의 또는 산업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 또는 세력 간의 힘의 균형은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김대중은 유력한 야당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전인 1955년에 『사상계』에 발표한 「한국 노동운동의 진로」라는 글에서부터 이미 자본과 노동의 세력균형에 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2)]

>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지향할 길은 죄악적인 착취와 지배를 자행하는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일방, 우리의 실정이 용납지 않고 겸하여 전체주의적인 통제와 생산능률의 후퇴를 면치 못하는 사회주의 자체도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며, 결국 사유재산과 개인의 창의는 이를 어디까지나 존중하되 종래와 같은 자본만의 우위 지배를 단연 배격하고 노동, 자본, 기술의 3자가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동함으로써 생산의 급속한 향상을 기하고 그 이윤의 분배에 있어서도 노동자와 기술자 역시 응분의 참여가 허용될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김대중 1955[1997], 18)

즉, 경제적 민주주의가 계급 또는 계층 간 세력균형이라는 관점은 이미 정치인 김대중이 지닌 사상의 초창기에서부터 중요한 구성요소였던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대중경제론의 각 단계별로 민주적 참여와 세력균형이라는 키워드가 어떤 논리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 글은 당시 30대 무명의 정치 지망생이었던 김대중이 "노동운동 연구가"라는 직함으로 쓴 글이었다. 이름은 金大仲으로 표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삼웅(2009)을 참조하라. 한편 이 글은 1891년 교황 레오 13세가 발표한 칙어(Rerum Novarum)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코포라티즘적 논의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민영화 만능주의'가 세계대공황의 씨앗: 도쿄대 교수 우자와 히로부미 대담' 「한겨레」 2009/02/13을 참조하라.

1) 대중경제론

대중경제론[3]은 기본적으로 특권경제와 대중경제의 길항적 대립관계라는 인식틀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이는 용어만 다를 뿐 매판경제와 민족경제를 대립시키는 민족경제론의 문제설정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류동민 2007).

대중경제론에서 '대중경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당위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반면, 대중사회는 이미 당시의 한국사회가 도달한 실증적 개념으로서 사용된다. 그런데 실증적 개념으로서의 후자가 발전해나갈 방향으로 "상이한 이해집단 간의 이해를 조화시키는 대중민주주의"(대중경제연구소 1971, 28)가 파시즘 및 사회주의에 대립되는 긍정적·낙관적 전망으로 주장되고 있다. 즉, 대중사회에서 대중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중민주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김대중은 자서전에서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나의 대중경제론은 해방 이후 한국 경제를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태동했다. 제7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 이를 주장했는데 1969년 『신동아』에 기고한 「대중경제론을 주창한다」에 핵심 내용이 들어 있다. 나는 이 글에서 대중 경제의 개념을 사회의 실질적인 생산력

---

3) 대중경제론의 기본적인 텍스트는 『김대중씨의 대중경제 100문 100답』이지만, 『신동아』 1969년 11월호에 발표된 「대중경제를 주창한다」는 짧으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김일영(2006)은 이것도 박현채가 대필한 것이라 추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 1〉과 같이, 마르크스 경제학자인 박현채가 썼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씨의 대중경제 100문 100답』과는 이질적인 요소들도 강조되고 있다. 김대중 자신도 자서전에서 『김대중씨의 대중경제 100문 100답』의 대필은 사실상 인정하고 있으나, 이 글은 직접 썼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김대중 2010a, 220). 일반적으로 자서전의 내용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두 텍스트가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아울러 김대중 정도의 정치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글을 발표할 때, 사실상의 집필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 못지않게 스스로 어떤 내용을 취사선택하였는가에 주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대중경제론을 하나의 정책이념으로 파악하는 시도로는 정상호(2008)를 참조하라.

인 근로 대중의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케 하는 동시에 그들의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경제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대중 경제를 펼치기 위해서 민주주의 체제의 완성을 전제로 했다. 대중의 의사가 필수불가피한 조건이라고 역설했다.(김대중 2010a, 220-221)

일반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는 계급 간의 이해를 조화시키는 중립적 장치라기보다 궁극적으로 지배계급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이해된다. 그런데 대중경제론에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강조되면서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층 간의 세력균형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계급의식이 희박하고 보수적인 중간층"(대중경제연구소 1971, 27)이 갖는 두 가지 발전방향 중에서 낙관적인 방향은 "자본주의적인 국민경제에 있어서 두 개의 기본적 이해집단인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집단 사이에서 안정세력으로서 존재하는 가능성"이며, 이 "가능성이 실현될 경우 계급대립이나 계급적 지배에 대신하여 상이한 이해집단 간의 이해를 조화시키는 대중민주주의를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중경제연구소 1971, 28). 즉, 대중민주주의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조정해주는 완충장치로서의 중간층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4)]

민족경제론적 관점에서도 계층 간 이해 조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박현채 1969[2006], 764-5), 대중경제론에서 이 부분의 역할은 매우 독특하다. 실제로 당위적 지향으로서의 대중경제 또는 대중민주주의를 담당할 주체 또한 새로운 중간층으로 설정되고 있다. 당시의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한 중간층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민족지식인 및 민족자본가를 중심으로 국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육성·창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설정되고

4)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이는 명백하게 '국가물신'(Kim & Park 2007)이라고 비판받을 만한 주장이다.

있다.

국가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는 것은 이른바 노자공동위원회 또는 공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음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위원회의 권한은 심하게 말하자면 파시즘을 연상할 수도 있을 만큼 막강한 것이었다.[5)]

> … 자본과 근로자 간의 힘의 균형관계에 비추어 국가가 이에 개입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칭「노자공동위원회」를 두어 모든 기업은 동 위원회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지우는 동시에 이 위원회의 권고가 기업에게 상당한 규제력을 갖도록 할 것이다.(대중경제연구소 1971, 62-3)

또한 이러한 구상은 비록 최종적으로는 민간 불하를 전제로 하는 과도기적 조치라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정된 관건산업(關鍵産業 Key Industry)에 있어서 국영기업의 창설과 경영이라는 국가자본주의적 확대"(대중경제연구소 1971, 59)와도 맞물려 있다. 그러나 김대중(1969)에서는 이와는 달리, 행정부에 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관영독점기업을 민영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대중경제연구소(1971) 또는 민족경제론의 관점과는 분명히 이질적인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요소는 그가

---

5) 대중경제연구소(1971)에서는 노자공동위원회와 공정운영위원회가 혼용되고 있다. 이는 여러 명의 집필자가 동시에 참여하면서 최종적으로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김대중 자신은 만년의 자서전에서 공정운영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물론 파시스트나 심지어는 극우주의자들도 전시통제하에서 일종의 연합을 취하는 사례가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것이 제약적 상황하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 여겼기 때문이다(Morris-Suzuki 1989, 제3장). 이들의 구상에서 흔히 제기되는 것이 정부 산하의 강력한 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사적 이윤 추구를 통제하자는 것이다. 심지어는 경영자의 임면권까지도 이러한 위원회에 부여할 것을 주장한 경우도 있었다.

1970년 『사상계』에 발표한 「70년대의 비전: 대중 민주체제의 구현」이라는 글에서도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다.[6]

> 여기서 특히 강조할 것은 대중경제는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의 기능을 존중하는 대중경제의 바탕 위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발전과 운용은 크게 격려될 것이며 그것이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에 공헌하는 한 결코 침해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김대중 1970, 90)

한편, 김대중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나는 이때[대중경제론 단계-인용자]부터 국가 경제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제안했다. 이 기구를 통해 정부가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 거래와 소비자 보호, 근로 대중을 위한 적절한 소득의 재분배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아울러 당시로는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산업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거대한 독점적 관영 기업의 민영화와 종업원 지주제의 실시를 주장하기도 했다.(김대중 2010a, 221)

이 부분의 설명은 적어도 『김대중씨의 대중경제 100문 100답』이라는 텍스트에 나타난 서술과는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정운영위원회(노자공동위원회)의 권한은 자서전에서 설명

---

6) 이 글에서는 특히 "… 대중민주체제를 위한 두 개의 하위체제로서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90)라는 개념의 배치를 상정하고 있다. 즉, 대중경제체제는 대중민주체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셈이다.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서전에서의 서술은 오히려 1971년 이후 변화한 김대중의 생각이 회고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민영화 문제는 그다지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는 김대중(1969)이나 김대중(1970)에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김대중씨의 대중경제 100문 100답』이 박현채의 영향 때문에—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약화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쨌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문제는 대중경제론 단계에서부터 이미 전면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그 키워드는 '세력균형' 및 '대중참여'임을 다음과 같은 단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 대중경제체제하 소득 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본주의적 국민경제의 기본논리를 인정하면서 이것을 국가매개로 경제적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힘의 균형 관계에 의해서 조정하도록 한다는 입장에서 제시될 것이다. 이것은 상이한 이해집단 간의 자기집단의 이익 실현을 위한 요구가 집단적 요구로 제시될 수 있도록 광범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바, 이는 대중민주주의 및 대중경제가 갖는 다원적 사회계층 간의 세력균형론적 입장에서 연유한다.(대중경제연구소 1971, 289. 강조는 인용자)

이상에서 분석한 대중경제론의 구성요소와 민족경제론의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Rieu 출간 예정).[7]

---

7) 〈표 1〉에서 ○는 민족경제론에서 강조되는 요소임을 의미한다. 또한 조용범(1973)은 박현채의 대필이라는 것이 정설이거니와(김기선 2006), 설사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민족경제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대중경제론의 구성요소와 그 원천

	대중경제론	민족경제론	민간주도형적 요소
이중구조	대중경제와 특권경제의 괴리	민족경제와 국민경제의 괴리	
민족경제	결여(국민경제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	○	
체제지향	한국적형 혼합경제체제 (수정자본주의)	민족혁명형 발전*	비자본주의적 길 비판 (김대중 1969; 김대중 1970) 마르크스에 대한 철학적 비판(김대중 1969)
국가주도	국가에 의한 경제의 계획적 운용	○	행정부에 경영기법도입 관영독점기업 민영화 (김대중 1969)
민주주의	대중경제의 전제조건	○**	
축적원천	국내 – 국가자본 및 중소기업 강조 외자 – 철저한 국가관리	○	
투자주체	국영기업(한정된 관건기업)의 과도기적 창설 및 민간 불하 + 민족적 중소기업	○	
산업구조	생산재생산공업을 선도 부문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구조	○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시 (김대중 1970)
노동정책	경영참여 중시(노자공동위, 종업원지주제)		
무역정책	수입대체(무역=내포적 공업화 보완 수단)	○	

참조: * 조용범(1973), ** 박현채(1969)

2) 대중참여경제론

김대중은 1980년대 초반 미국에 망명하면서 『대중참여경제론』[8]을 저

8) 이 책은 처음에는 *Mass Participatory Economy*라는 제목의 영어로 제작된 것을 한글로 번역하여 1986년에 출간되었고, 이후 1997년에 개정증보판이 나왔다(김대중 1986[1997]). 김대중전집편찬위원회 편(1989)은 『대중경제론』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의 초판에 『대중경제 100문 100답』을 부록으로 묶어 출간되었다. 김대중(1992)도 기본적으로는 대중참여경제론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일종의 증보판이다. 김태동 교수가 필자에게 개인적으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술하게 된다. 그 자신 이 책의 서문 및 자서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기에는 당시 미국에 있던 경제학자 유종근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일단 주목할 것은 경제민주주의 또는 산업민주주의를 각 이해 집단 간의 힘의 균형을 통한 평등으로 파악하는 세력균형론적 입장이 대중경제론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박정희 정권에서의 양적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발전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 한국 경제의 급속 성장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모든 집단의 참여를 수반하지 못했으므로 경제 발전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것이다.(김대중전집편찬위원회 편 1989, 24)

따라서 대중참여경제론에서도 경제발전은 대중경제론 단계에서 주장된 대중민주주의와 유사한 개념 하에서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 성장이라는 목표는 경제의 제반 부문 간의 그리고 지역 간의 균형된 발전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가, 노동자, 농민, 소비자 등의 모든 집단이 민주정부 하에서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의 여러 국면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김대중 1986[1997], 185)

> 한국에서 '대중참여경제'를 실현해 보려는 나의 계획은 민주적인 정치체제 하에 모든 집단들이 참여하는 것만이 진정하고도 영속성 있는 경제 발전을 달성시킬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김대중전집편

최초의 영어판 이후의 판본부터는 김태동, 이진순 두 교수가 수정 및 보완작업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찬위원회 편 1989, 24)

그러나 대중참여경제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대중경제론에서보다는 시장주의적 관점이 훨씬 강화된 형태로 나타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시장기능의 회복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등장한다.

> 따라서 정부간섭을 배제하고 시장기능을 회복시켜 기업가 · 노동자 · 농민 · 소비자 등 모든 집단이 자유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제시코자 하는 계획 중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김대중 1986[1997], 33)

대중참여경제론에서는 무엇보다도 대중경제론 단계에서 강력한 국가의 역할을 전제로 하였던 노자공동위원회 구상이 사라진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는 다같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는 정치 · 사회적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국가권력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여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경제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자본주의 경제는 완전한 '자유' 시장경제가 될 수 없다. 철저한 자유시장경제 체제 없이는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김대중 1986[1997], 20)

> …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진 눈부신 고도성장률은 훌륭한 인적 자원

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다. 만일 정부가 어리석은 시장 간섭을 삼갔더라면, 경제성장률은 더욱 더 괄목한(sic!)만 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에 대한 나의 대안은 '시장기능에의 의존'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다.(김대중 1986[1997], 37)

특히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맥락이기는 하지만, 국영기업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첫째로 국영기업체나 준국영기업체의 창설은 사기업의 발전을 제약시켰다. 이윤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공공기업체가 비능률적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둘째로 기업 경영 능력보다는 통치자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임명된 경영진의 무능력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

끝으로 이와 같이 필요 이상으로 마구 창설된 국공영기업체는 대규모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 이러한 공기업체를 민영화하면 부패를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독점 대신 민간 기업체들 간의 경쟁과 경영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김대중 1986[1997], 37)

이는 대중경제론 단계의 "국영기업의 과도기적 창설" 등의 관점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1969) 및 김대중(1970)에서 나타난 관영독점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주장은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관주도형 경제정책으로부터 민간주도형 정책으로의 전면적 전환"(김대중 1986[1997], 26)은 대중참여경제론 전체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한편, 노동자의 경영참여와 분배의 형평을 강조하는 '참여'라는 키워드 역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만 노자공동위원회 구상은 사라지고 그 대

신에 “협력적 노사관계”(김대중 1986[1997], 245)가 강조된다.

> 앞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책임 있는 국민경제의 일원으로 거듭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촉진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하면 노동자는 생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며 노사간의 협조, 노사간의 동반자적 관계의 정착을 통해 국민경제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의 이기주의를 청산하게 될 것이다.(김대중 1986[1997], 256)

> … 어느 한 집단이라도 경제 성장의 열매를 분배받지 못한다면 결함이 있는 경제발전이 된다. 따라서 모든 집단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 생활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장애인, 노약자, 실업자 등)에게 그것을 공급해줄 사회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측이 그들의 사회적 의무를 등한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김대중 1986[1997], 297)

그런데 이 책은 노사관계와 관련한 서술에서 한국 경제가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 새로운 발전단계로 들어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 우리 경제는 이미 적어도 1980년대 중반에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고급 제품을 생산함으로써만이 성장이 가능한 ‘집약적 성장’ 단계에 진입하였다. 집약적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성과 창의성 그리고 기능 축적이 필수적이다.
>
> 이러한 경제 상황의 근원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노사관계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 정책을 정립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이

다.(김대중 1986[1997], 245-6)

대중경제론 작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박현채가 이른바 사회구성체논쟁을 통해 이 시기의 한국경제를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규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참여경제론의 현실 인식은 대중경제론 단계의 그것과는 크게 달라졌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대중참여경제론이 대중경제론과 달라진 데에는 그 영향이 민족경제론의 박현채로부터 미국식 경제학 교육을 받은 유종근으로 옮아갔다는 점에 일차적으로 기인하겠지만, 김대중의 현실 인식이 변화하였다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국가주도형 발전방식(이른바 발전국가 모형)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판으로부터도 확인된다.

>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1980년대에 박 정권이 중앙집권적 경제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 단시일 내에 경공업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데 성공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는 점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 시기까지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극히 단순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 상대도 명확하고 그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끌고 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양적으로 커지고 산업구조가 질적 변화와 함께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 주도의 경제 운영은 효율보다는 비효율을, 합리보다는 비합리를 초래하게 되었다.(김대중 1986[1997], 25)

그러므로 대중참여경제론 단계에서도 김대중의 경제민주주의는 '세력균형'과 '참여'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 입각한 것이었으나, 그 달성을 위한 방법 및 정책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하는 쪽으로 두드러지게 중심을 옮겨갔다. 1997년에 출간된 대중참여경제론의 개정증보판(김대중 1986[1997])에서는 세계 각국이 "민주적 자본주

의 경제체제"(21)로 중도 통합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는 다같이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향"(20)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라는 경제체제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하위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20)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은 현실사회주의의 붕괴가 완료된 1990년대 후반의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서, 집권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의 인식단계에 이른 서술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부분도 김대중(1969) 및 김대중(1970)에 나타난 비자본주의 발전의 길에 대한 비판이나 마르크스 및 케인스에 대한 철학적 비판 등의 요소, 즉 대중경제론 및 민족경제론과 이질적인 요소가 자기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한편 대중경제론에서 명시적으로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전제되고 있던 "민족경제의 자립"(대중경제연구소 1971, 53)에 관한 문제의식도 대중참여경제론 단계에 오면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생각의 단초는 김대중이 1983년 일본『世界』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외국 투자에 대해 식민지화나 매판자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개방의 긍정적 의미를 강조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 외국의 투자에 대해 무조건 식민지화라든가 매판자본이라는 식의 비난을 하는 것은 매우 비경제적인 말투다. 지금 세계는 하나의 세계로 되어 가고 있고, 무역이나 경제 협력없이는 해나갈 수가 없다. 문제는 협력을 받는 측이 자주적인가, 종속적인가에 달려 있고 원조를 사용하는 방법 여하에 달려 있다.(이병천 2007, 239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대중참여경제론에서 자본 자유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 또한 대중경제론과는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인데, 이와 동시에 1980년대 당시 신자유주의 시대로 진입한 미국 자본주의의 논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병천 2000, 114). 즉, 『대중경제 100문 100답』이 경제정책 각론을 외자도입정책에 대한 비판(제2장 「대중경제체제하의 외자도입정책」)으로부터 시작할 정도로 외자 의존적 수출지향정책을 비판하는 데에 공을 들인 점은 그것이 민족경제론적 사고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 및 한국에서도 정작 외채위기가 심각한 이슈로 등장한 대중참여경제론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이 사라져 버렸다. 같은 맥락에서 대중경제론에서 강조된 바 있던 '내포적 공업화'나 '민족경제의 자립'은 1983년의 인터뷰에서도 다음과 같이 그 흔적이 남아 있으나, 대중참여경제론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만다.

> 한국경제를 내포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의 내부에서 경제의 모든 것의 상호 작용을 두텁게 짜고 두께있게 함으로써 안정된 경제 구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수출에 전면 의존하여 국제적으로 조금만 불경기가 되면 동요하는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내포적인 경제발전을 지향해야 한다.(이병천 2007, 239에서 재인용)

3)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

1997년 12월 IMF위기의 발발과 함께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의 병행 발전"을 주장한다. 이 시기 김대중의 이름으로 발표된 책으로는 대통령선거 이전인 1997년에 출간된 『김대중의 21세기 시민경제이야기: 우리 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김대중 1997)가 있다. 이 책에서는 아직 병행 발전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민주적 시장경제"가 한국경제의 비전으로서 제시되고 있다.[9] 여기에서 민주적 시장경제

9) 이때 민주적 시장경제와 대립을 이루는 해소되어야 할 부정적인 개념으로 "권위주의적 관치

는 “정치적 민주화에 맞추어 경제운영에 민주주의 원리, 원칙의 적용을 확대하고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진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김대중 1997, 43-4)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시장경제에 관한 김대중의 생각은 대중경제론 단계에서와는 두드러지게 달라져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한다.

> 시장질서는 근본적으로 평화체제이다. 시장경제는 교환을 그 본질로 하는데, 거래 당사자가 서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교환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거래를 그만 두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싸울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장질서는 각 개인들이 서로 다른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시장에서의 교환을 통해 서로 다른 목표가 조화되도록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장경제는 자유주의와 평화주의의 기본 전제이다.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주의는 세계평화의 기본전제이다.(김대중 1997, 15-16)

인용문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단계에서 시장은 ‘사지(또는 팔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탈퇴(exit)의 원리만 작용하는 평등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굳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등의 급진적 관점까지 빌지 않더라도, 시장이 비대칭적인 권력이나 정보를 가진 거래당사자들 간의 불평등한 공간일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는 주장이다.[10)]

경제”가 제시된다. 아울러 “민주적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데 최대의 걸림돌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김대중 1997, 44-5)이라 주장된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국민의 정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정리된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1998)를 참조하라.

10) 노동력 상품의 거래가 가장 대표적으로 권력관계가 작용하는 거래이다. 자본주의적 이윤의 발생을 자본가계급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착취로 보는 마르크스경제학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주류경제학 안에서도 노동력 거래가 갖는 특수한 측면을 강조하는 이들은 많다. 주류경제학적 흐름에서 이러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는 스티글리츠(2007)를 참조하라. 참고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학자들의 전형적인 논리가 본문의 인용문과

김대중의 집권 이후 발간된 정부자료인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에서도 시장경제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 경제적 자유를 기초로 한 시장경쟁은 개별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지식과 정보의 한계를 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협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효율을 극대화한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에서 기업가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나 다른 기업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며, 사회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대한민국 정부 1998, 57-58)

즉, 병행발전론 단계에서 민주적 시장경제는 사실상 자유시장경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미 대중참여경제론에서 경제체제 개념 자체가 자유시장경제의 하위개념으로 사용되던 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다.[11] 이는 앞서 인용한 1955년의 글인 「한국 노동운동의 진로」에서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해 명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훨씬 시장주의적 기조에 가깝게 변화하였음을 말해 준다.

한편, 이 단계에서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사회적 시장경제' 개념이 적극적으로 원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의 경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정부 발간자료나 DJ노믹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 대중경제론 단계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민족지식인의 창조적 역할에 의거하는) 개입과 경제의 계획화에 의한 한국적 형의 혼합경제체제"(대중경제연구소 1971, 53)가 지향점으로서 명확하게 설정된 것과는 매우 다른 점이다. 또한 이는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이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어디까지나 공동체적 참여 개념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점(이덕재 2008)과도 관련이 있다.

만들어진 국책연구원 보고서에도 프라이부르크학파는 중요한 이론적 지주로서 등장한다.[12)]

>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개별적 자원 배분과 관련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질서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자유경쟁과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시장경제 질서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진입 장벽과 퇴출 장벽을 제거하는 한편, 자원배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삼갈 것이다.(대한민국 정부 1998, 61)

> 프라이부르크학파의 경제 이념은 개인의 자유, 경제적 자유, 그리고 힘의 균형이라는 3가지 축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철저히 경쟁시장을 보호하고 감독하며 그리고 힘의 불균형에 의한 약자의 착취를 막아주는 데 있다고 하였다. … 힘의 집중에 의해 한편으로 편중된 시장경제체제로부터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시장경제가 되는데 최후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된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는 약정된 '경기의 법칙'을 법 제도로 설정하

---

12) 이 보고서의 지은이들은 1990년대 후반 김대중에 대한 경제정책 조언 그룹인 '중경회(中經會)'의 구성원들이다.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질서자유주의가 강조되는 데에는 중경회의 영향이 컸다. 김태동 교수에 따르면,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명칭도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가져올지도 모를 색깔논쟁을 우려하여 붙인 것일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물론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중경회 멤버들은 경제정책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졌고 그 내부에서도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경회 회장 및 산업연구원장을 역임했던 이선의 다음과 같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들의 사고의 일단을 보여준다.

> 남북경협을 제외하고는 참여정부를 지나 현 정권에까지 이 정책은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4대강사업이나 의료 ·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이번 정부가 잘 잡고 시행하는 정책이라 생각해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벤처를 비롯한 중소기업 육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매경이코노미(1521호) 2009/09/02. **강조**는 인용자)

여 보장하여야만 한다. 정부는 다만 경기의 일반 규칙의 제정자이고, 그 외는 전적으로 민간 부문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경제질서이다.(이선 · 민경휘 · 장현준 · 정세열 1999, 228)

이러한 맥락에서 각 경제주체의 '참여'라는 김대중의 경제적 민주주의 개념의 핵심지주 중의 하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1세기 한국 경제의 기본 질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바탕을 두되 공동체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연한 질서가 되어야 한다. 이 같은 경제 질서는 경쟁력과 성장의 원동력을 각 경제 주체의 참여와 창의 및 사회적 합의 형성에서 찾는다. 또한 그것은 효율과 형평의 조화를 추구하며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이선 · 민경휘 · 장현준 · 정세열 1999, 227)

그런데 이때 '참여'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전선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것이라기보다는 재벌 대 중소기업(및 소비자)의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인상을 준다. 김대중 자신의 글은 아니지만 당시 DJ노믹스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아래의 글은 이를 지적하고 있다.

대중경제론의 핵심은 소비자 수탈에 의한 관치재벌육성 정책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서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위주로 하는 경제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비교해 본다면, 관치재벌육성 정책이 천민적 재벌독점적 자본 집적과 축적에 의한 경제성장론인 반면 대중경제론은 그 대안으로서 기업가와 노동계급의 창발성에 의존한 생산성 발전을 위주로 한 경제성장론이다.(양신규 2000, 167)

즉, 대중경제론 단계에서의 노동과 자본의 대립, 그 완충세력으로서의 중간층 육성이라는 관점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13]

한편 이 단계에서 '균형'이라는 또 하나의 키워드도 대중경제론 단계에서 명확한 것처럼 계급 · 계층 간 세력균형이라기보다는 성장과 복지의 균형과 같은 기술적인 의미로 약간씩 변화하는 뉘앙스를 준다.[14] 특히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노동시장유연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된다.

> 21세기 한국적 노사관계의 철학은 시장경제 이념에 대응하는 인간성 존중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그의 구현을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 문제는 기업 수준에서의 미시적 협력주의와 국가경제 수준에서의 거시적 협력주의의 제도화와 상호균형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미시적 협력주의는 기업수준에서 근로자의 강한 귀속감 또는 종업원의 직업정신과 노사의 이익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노사가 협의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에서 출발한다. 거시적 협력주의의 제도화는 먼저 정부 내에 중앙 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사관계제도 전반에 걸친 중재, 조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작업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전국 단위의 노 · 사 · 정 및 공익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상설기구로 관련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 것에서부

---

13) 양신규는 "김대중 대통령이 70년대부터 견지해온 중소기업과 소비자 참여 위주의 경제 정책"(2000, 167)이라는 점에서 말하자면, 대중경제론, 대중참여경제론과 병행발전론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경우 대중경제론(및 민주적 시장경제론)의 핵심은 "외국자본, 국내 대자본, 국내 중소자본의 천하 삼분 형태의 경쟁체제"(2000, 169)를 형성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신규(2000)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은 김성구(2000)를 참조하라. 김성구는 1970년대의 대중경제론과 민주적 시장경제론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그의 정치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여'라는 키워드의 내용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는 것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14) 김대중은 1982년의 옥중서신에서도 한국 경제 정책의 기본 원칙을 여러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성장 · 안정 · 분배 삼자가 균형 잡힌 경제를 말하고 있다(이병천 2007, 238).

터 시작된다.(김대중 1997, 176)

위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노사운영위원회 구상은 김대중 집권 이후 노사정위원회로 현실화하였지만, 그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대중경제론 단계에서의 노자공동위원회 (또는 공정운영위원회) 구상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3. 결론

이상에서 대중경제론, 대중참여경제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의 세 단계에 걸쳐 김대중의 경제적 민주주의 개념의 구조에 관해 살펴보았다. 각각의 단계에서 지향하는 바로서의 당위적 개념은 대중경제, 대중참여경제 그리고 민주적 시장경제—사실상 자유시장경제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로 변화하여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단계에서 당위적 목표의 밑바탕을 이루는 개념으로는 계급 · 계층 간의 세력균형과 각 주체들의 정치 · 사회 · 경제적 의사결정에의 참여라는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놓여 있었다. 즉, 전체적으로 '세력균형'과 '참여'를 두 가지 축으로 삼는 경제적 민주주의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상황변화에 따라 도구의 역할을 하는 2차적 이념으로는 진보적 민족주의→(질서자유주의를 거치거나 병행하는) 시장주의로 옮아갔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 수준에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는 단계에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효율적 기능에 의존하는 단계로 변화해갔던 것이다. 물론 밑바탕에 깔린 두 개념이 완전히 동질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세 단계 전체에 걸쳐 라카토스(I. Lakatos)적 의미에서의 중핵(hard core)—시대적 상황이나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보호대(protective belt)와는 달리—

으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대자들에 의해 항상 제기되었던 '용공'이라는 비판도 만약 그 내용을 마르크스주의로 이해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밑바탕을 이루는 개념인 계급 간 균형 자체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는 예외적이고 일시적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균형'과 '참여'가 중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김대중 경제사상이 갖는 내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즉, 모든 단계에 걸쳐 (세력)균형과 참여가 기본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나, 그 지향과 수단에는 변화가 있었다. 대중경제론 단계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일종의 통합으로서 설정되던 대중경제라는 지향점은 대중참여경제론 단계를 거치면서, 결정적으로 병행발전론 단계에서는 '민주적'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는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시장경제'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는 무엇보다도 경제 현실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식의 변화가 작용하였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 선택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즉, 각 시기별로 일종의 주요 모순이 변화하면서 김대중 자신이 그리고 있던 이론적 전선이 변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1971년의 대통령선거 국면에서는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의 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며, 수출드라이브정책에 의한 경제성장을 통해 대외 종속이 문제로 지적되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표 2〉 김대중 경제사상의 변화

	대중경제론	대중참여경제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
지향점	대중경제	대중참여경제	민주적 시장경제
수단	국가의 적극적 역할	· 국가개입 최소화 · 시장기능에의 의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기저를 이루는 개념	· 계급 간 세력균형 · 참여	· (계급 간) 세력균형 · 참여	· 균형(다소 기술적인 의미) · 참여

동원인가 참여인가라는 프레임과 종속인가 자립인가라는 프레임의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였다.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이 결합할 수 있었던 근거도 여기에 있다. 이때 일종의 시대정신으로서의 국가의 적극적 역할(또는 발전국가)은 오히려 중요한 쟁점을 형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김대중(1969) 및 김대중(1970)에 나타난 민영화 등의 주장이 비주류적인 담론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1980년대로 넘어가면서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의 관점에 못지않게 점차 국가 대 시장이라는 관점이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가 대 시장의 프레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관치경제에 대한 비판이 곧 기존의 권위적 동원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시장이 민주주의의 자리에 겹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애초 경제적 민주주의를 계급 간 세력 균형의 달성으로 보는 입장에 내포되어 있던 국가부문에 대한 견제논리, 예컨대 민영화 논리(김대중 1969; 김대중 1970)가 전면으로 등장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던 셈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새로운 명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에 비해 시장의 역할에 좀 더 무게를 싣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참여가 완전히 시장으로 대체되면, 그것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은 다른 한편으로 노사정위원회나 생산적 복지 등의 개념을 통해 '균형'의 관점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 혹자는 나를 '신자유주의자'라고 비판했다. 아마도 외환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보여 준, 철저한 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한 태도에서 그런 비판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997년 IMF 체제 이후 우리의 선택은 시장 경제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생산적 복지'는 시장 경제의 부작용, 폐해를 시정하고 보완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생산적 복지'는 사후적인 복지, 시혜적인 복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에서 시작

했지만, 과다 복지가 가져온 유럽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것이기도 했다.(김대중 2010b, 341)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김대중은 매우 불안정하고 양립하기 어려운 현실적 균형을 추구하였던 셈이다. 이것은 권력을 추구하는 현실정치가인 동시에 나름대로 세계관을 갖춘 경제사상가라는 두 가지 면모를 지닌 김대중의 견해가 오랜 세월에 걸쳐 시대적 추이와 정치적 역학관계를 반영하면서 변화하여 갔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김기선. 2006. "한국 민중운동사의 거대한 뿌리 '박현채'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웹진『희망세상』3월호.

김대중. 1955. 김삼웅 엮음. 1997. "한국 노동운동의 진로."『사상계』10월호.

_____. 1969. 1997. "대중경제를 주창한다."『신동아』11월호.

_____. 1970. 김삼웅 엮음. 1997. "70년대의 비전: 대중 민주체제의 구현."『사상계』1월호.

_____. 1986[1997].『대중참여경제론』. 산하.

_____. 1992.『세계 경제 8강으로 가는 길』. 청도.

_____. 1997.『김대중의 21세기 시민경제이야기: 우리 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산하.

_____. 2010a.『김대중 자서전 1』. 삼인.

_____. 2010b.『김대중 자서전 2』. 삼인.

김대중전집편찬위원회 편. 1989.『대중경제론』. 한경과연.

김보현. 2006.『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삼웅. 2009.『후광 김대중평전』(24). http://blog.ohmynews.com/kimsamwoong/289276.

김삼웅 엮음. 1997.『인동초가 피기까지: 대통령 김대중의 정치철학(논문, 연설문, 강연록)』. 한울.

김성구. 2000. "무지 위에 세워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말』6월호.

김일영. 2006. "조국근대화론 대 대중경제론: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결."『박정희시대와 한국현대사』. 선인.

대중경제연구소. 1971.『김대중씨의 대중경제 100문 100답』. 범우사.

대한민국 정부. 1998.『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국민의 정부 경제청사진』.

류동민. 2007. "민족경제론이 대중경제론에 미친 영향."『기억과 전망』통권 17호.

박현채. 1969. "계층조화의 조건." 고 박현채 10주기 추모집 · 전집 발간위원회 편. 2006.『박현채 전집』. 해밀.

스티글리츠, 조지프 E. 강신욱 옮김. 2007.『시장으로 가는 길: 스티글리츠의 신고전학파 시장이론과 시장사회주의론 비판』. 한울.

양신규. 2000. "'민주적 시장경제'는 유일, 완벽한 진보노선."『말』5월호.

이덕재. 2008. "민족경제론의 공동체성과 현재적 의의."『동향과 전망』제72호.

이병천. 2000. "한국형 발전모델의 역사와 전망."『전환시대의 한국사회』. 세명서관.

_____. 2007. "민족경제론과 대중경제론: 민족경제론의 현실적 변용으로서 대중경제론에 대하여(1960년대 말 – 70년대 초)."『사회경제평론』제29권 2호.

이영훈 외. 2006.『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 2』. 책세상.

이 선 · 민경휘 · 장현준 · 정세열. 1999.『민주주의와 시장경제: DJ노믹스의 이론적 · 경제사적 고찰』. 산업연구원.

임지현. 1999.『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정상호. 2008. "정책이념(Policy Idea)으로서 대중경제론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

구.”『기억과 전망』 통권 18호.
조용범. 1973.『후진국 경제론』. 박영사.

Kim, Soohaeng, and Seung-Ho Park. 2007. “A Critical Reappraisal of the Park Chung Hee System.” In eds. by Hart-Landsberg, Martin, Seongjin Jeong and R. Westra. *Marxist Perspectives on South Korea in the Global Economy*. Ashgate.
Morris-Suzuki, T. 1989. *A History of Japanese Economic Thought*. Routledge.
Rieu, Dong-Min(forthcoming). “The theory of Mass Economy: A Critique of Park Chung-Hee’s Accumulation Regime.” Kim Dae-Jung Presidential Library & Museum.

투고: 2010.8.31 심사: 2010.10.13 확정: 2010.10.21